

추미애 “사람이 높은 세상” 출사표

23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김두관, 다음달 1일 출마 선언

양향자 의원도 막판 고민

민주 대선주자 9명으로 늘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면돌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김두관 의원도 다음달 1일 공식 출사표를 낼 예정이어서 여권의 잠룡은 10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광주의 양향자 의원(서구 을)도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어 주목된다.

추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길을 넓게

들기 시작했다”며 대선 도전 입장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식은 23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잇달리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서 생중계된다. 추 전 장관 측에서는 열성 친문 지지층이 결집한다면 예비경선을 무난히 통과, 기득권에 맞서는 ‘추다르크’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경남도지사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다음달 1일 출마를 선언한다. 두 사람이 잠정적으로 여권 대선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9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후보가 7명 이상일 경우 6명으로 줄이는 컷-오프(예비 경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의 양향자 의원도 대선 출마를

놓고 막판 고민에 들어갔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모토로 대선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2일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 의원이 출마한다면 같은 여성 주자인 추진 장관과 경쟁이 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초반 레이스부터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비 경선 통과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가 10명에 육박한다면 예비 경선이 예상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도 본격화되는 등 경선 흥행도 불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與 “흥정 대상안돼” 野 “이러니 내로남불”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다시 충돌

법안의 게이트 격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사위원장을 뺀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원장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여야 협치를 위해 상당수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는 취지이지만, 되돌려 말하면 법사위원장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에서 “민주당이 탐욕을 부리며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도 전북 군산을 찾은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본인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라든지 협치의 의지가 아닌 의도라면 저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 여야 대변인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법사위원장직을 흥정의 대상이라고 말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다”며 “윤 원내대표야말로 협상의 ABC조차 모르는 것 같다.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이 여야 협상의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SNS에서 “21대 원구성 당시 미래통합당은 스스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와서 법사위원장에 목매는 이유는 국정 마비, 성과 없는 국회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도 10분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7개 상임위원장을 다 야당에 넘겨주고 협치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야당은) 일방적 이야기라며 기본이 나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법사위원장을 무슨 생각으로 맡아서 했냐. 이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유가족 위로하는 윤호중 대표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데뷔전’ 대정부질문... 여야 백신·추경 격돌

22일부터 사흘간 진행

여야는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신 접종과 추경 편성, 한미정상회담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성과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외교 성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을 위한 ‘민생 추경’의 필요성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0일 “백신 접종이 순항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생 무능론’을 부각할 태세다. 불확실한 백신 수급뿐만 아니라 부동산·일자리 현안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년간 법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탄 냈는데 이제 국민 안전과 직결된 백신 보급마저 지연되고 있다”며 “말로만 변화를 외치는 실상을 알리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총리가 바뀌었으니, 과연 정책 전환을 할 의지가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겠다”며 “국정의 미래가 김부겸 총리의 어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정치·외교·통일·안보(22일)에 이어 경제(23일), 교육·사회·문화(24일) 순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대변인 손절에 ‘X파일’ 돌출...尹, 링 오르기 전부터 악재

이동훈 열흘 만에 돌연 사퇴

국힘 입당 메시지 혼선 영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행보가 링 위에 오르기 전부터 삐걱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한 메시지의 혼선이 일었던 데다 논란의 당사자인 대변인이 돌연 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 탓이다.

지난 10일부터 윤 전 총장의 ‘입’ 역할을 하던 이동훈 전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전 대변인이 건강 등에 부담을

느껴 물러나기로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8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두고 돌출된 메시지 혼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변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 빅텐트론’을 두고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견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라는 물음에 “그러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다시 이 전 대변인을 통해 “입당 문제는 경계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반박 메시지를 내고 이어 중앙일보와 전화를 통해 부연 설명을 했다.

이에 더해 보수 진영 정치평론가도 야당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공감파’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윤석열 X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각에서는 제기한다. 장 소장은 전날 SNS를 통해 “윤 전 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파일을 입수했다”며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는 ‘폭탄발언’으로 여의도를 발집우신 듯 발각 뒤집어놓았다. “야권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진 것”(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다. 장 소장의 주장으로 시종에 떠도는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는 것도 윤 전 총장에게는 부담스럽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징벌적 손해 도입 건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의원이 20일 “광주 화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병훈 의원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관계자와 행정기관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24시간 상담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 매매 (상무지구)

-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8천** (용 4억가)
- 2) 보증금 **4천만**, 월 **300만**(임대완료)
- 3) 평수 **140평**(전용 100평)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 1) 100평 → 8천
- 2) 150평 → 1억1천

총 1,778평 → 9억
(용 4억가능)

10필지 전원주택
선착순 접수중

062-382-5500